

행 정 법

1. 다음의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 상 통치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있다.
- ② 통치행위의 주체에는 대통령 등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및 법원의 통치행위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징계의결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④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사인(私人)은 반덤핑부과처분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로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④ 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국가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어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규범에서만 인정되고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법적 권리이다.
- ③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 청구권의 성립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 ④ 제3자와 소권(訴權)의 포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 ②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에 관한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사업시행자 지정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5. 다음 중 행정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주체이지 행정권 발동의 상대방인 행정객체는 될 수 없다.
- ②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영조물법인으로 모두 행정주체로서 인정되나, 부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병원은 모두 행정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법인으로서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6.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하여,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도 상위법령의 명시적 위임이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된다.
- ②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원칙과 법치행정원칙에 위배된다.
- ③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하거나 사실적·법률적 사실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실효된다.
- ②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③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중의 하나인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8. 다음 중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④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증대된다.

9.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법률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의 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 ㉣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면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담당공무원의 반려의 의사를 표시할 때이다.
- ㉤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그에 따른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써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0.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 ②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재량행위의 경우 그 근거법규에 대해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 ②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③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이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다.
- ④ 「야생동·식물보호법」 상 곰의 옹지를 추출하여 비누, 화장품 등의 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곰의 용도를 ‘사육곰’에서 ‘식·가공품 및 약용재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행위는 재량행위이다.

12.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②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 ③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④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3.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 ② 치료목적의 마약류사용허가
- ③ 사행행위 영업허가
- ④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허가

14. 다음 중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안경사시험합격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
|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 ㉥ 행정대집행에서의 계고와 대집행영장의 통지 |

- | | |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15. 다음 중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령행정청의 기명과 서명이 생략될 수 있다.
- ②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 ③ 행정의 자동결정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적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도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④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16.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의 발동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질문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 ④ 단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한 때, 경찰관은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17.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②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 ③ 보통 훈령, 고시, 예규, 일일명령의 형식으로 이뤄지며 고유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 ④ 의무가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당해 기관은 행정규칙에 구속된다.

18.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자도 경찰책임을 부담한다.
- ② 행위책임에 있어서 그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
- ③ 상태책임을 지는 자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질 필요는 없다.
- ④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다.

19.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통하여 행사될 수 있다.
- ②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 ③ 「헌법」 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 ④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20. 다음 중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확약이 있는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② 대법원은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행정청의 확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법령이 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반대규정이 없는 한 확약의 권한도 함께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1.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용도를 무단변경한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 ③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매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2.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이유제시가 생략될 수 있다. 다음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유제시 생략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②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④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23.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되는 시설인 여의도광장
- ② 수도
- ③ 현금
- ④ 관용 자동차

24.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 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 ③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5. 다음 중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 ②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 ③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변형과징금의 1차적 목적은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자에 대한 최소침해의 수단을 찾는 것이다.

26.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자연인과 법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공공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 ④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7.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채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납자 등은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 ②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대집행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경우라도 위의 두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 ③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의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28. 다음 중 행정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 과태료의 부과요건·절차 등에 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거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 ㉣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29. 다음 중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권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②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③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위헌 선언 전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0.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우리 「헌법」 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3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
- ②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대법원장이다.
-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 ④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부의장이 된다.

3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로 한다.
- ㉢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164 ② 194
③ 224 ④ 254

33.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목욕탕영업허가에 대하여 기존 목욕탕업자
- ② 물품수입허가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의 제조판매업자
- ③ 영업소 간 거리제한규정을 위배하여 한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존의 일반소매인
- ④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대해 이를 다투는 지역주민

34.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기본법」에 의한 강제처분
- ②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강제철거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범죄의 예방과 제지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응급조치

35.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절차상의 위법도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 ②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직무행위에는 국회의 입법작용도 포함된다.
- ③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된다.
- ④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36.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②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인정한다.
- ③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없다.
- ④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있다.

37.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②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③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8. 다음 중 취소소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현행 「행정소송법」은 적극적인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집행정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 ④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39. 다음 중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형식·절차상의 위법은 물론, 내용상의 위법도 포함된다.
- ②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조리상의 신청권으로는 될 수 없다.
-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자신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 ④ 처분이 있음을 알고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는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0.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뿐만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에도 미친다.
- ② 처분 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소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